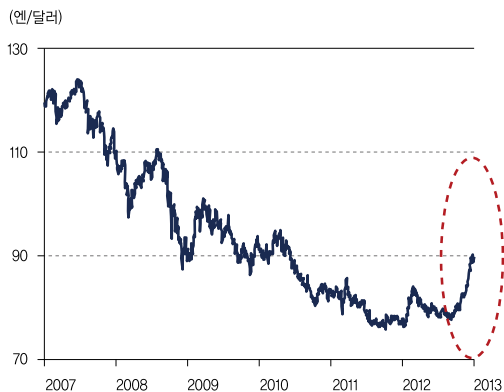


최근 일본정부의 금융완화정책 현황

-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지속적인 강세추세를 보이던 엔화가치가 최근 일본의 정권교체를 전후로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금융완화와 공공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아베노믹스(Abenomics)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일본은행은 지난 22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물가목표제, 무기한 자산매입 등을 도입하여 강력한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마련에 돌입함
- 2007년 이후 지속적인 강세추세를 보이던 엔화가 최근 일본의 정권교체를 전후로 약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엔/달러 환율의 급등세는 무제한 금융완화와 공공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인 아베노믹스(Abenomics)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자민당은 적극적 재정책대와 강력한 금융완화정책을 경제정책 공약으로 내세워 지난 12월 총선에서 승리하였으며, 엔화 가치는 아베 총리가 자민당 경선에서 총재로 당선된 9월 26일 (77.79엔) 이후 1월 22일(89.75엔) 현재까지 4개월간 약 13%의 큰 폭으로 절하됨
 - 이는 11월 중순 일본의 조기총선 실시가 가시화 되면서 최대 여당의 총재이자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천명해온 자민당의 아베 총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진 때문
 - 이러한 엔화가치의 폭락은 다른 주요 통화들에 비해서도 두드러진 현상으로 2012년중 엔화는 달러대비 10.0% 절하되어 특히 원화가 달러에 대해 8% 절상된 것과 대조적임
 - 한편,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중단으로 인한 천연가스 수입은 급증하는데 반해 수출은 감소하면서 2011년 이후 2년 연속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엔화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12년 무역적자 규모는 6조9천억엔으로 2011년 적자규모 2조6천억엔의 두 배를 넘어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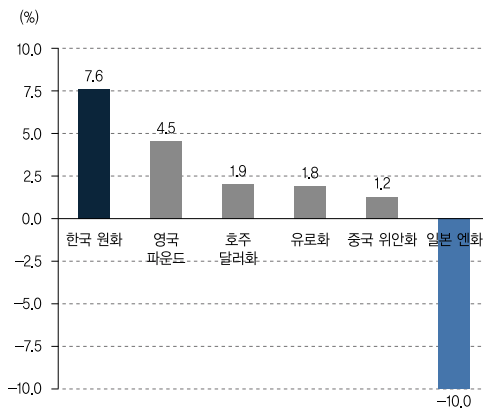


엔/달러 환율 추이



주 :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주요 통화별 달러대비 절상절하율



주 : 2012년중 절상(+)·절하(-)율
자료: 한국은행

□ 일본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일본은행은 22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물가목표제, 무기한 자산 매입 방식 등을 도입하여 강력한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기준금리는 현 0.0~0.1%로 동결하였으며,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의 전년대비상승률 2%로 결정하고 목표달성 시점을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언급
 - 중장기 물가안정목표는 지난해 2월 도입한 것으로 소비자물가의 전년대비 상승률 2% 이하 플러스 영역으로 하되 당분간 1%가 될 때까지 금융완화를 지속하기로 함
- 현재의 자산매입기금 한도인 101조엔을 금년말까지 소진하고, 이후 2014년부터 매월 장기국채 2조엔 및 단기국채 10조엔 등을 포함한 총 13조엔을 무기한 매입하기로 함
 - 지난 12월에 이미 일본은행은 자산매입기금의 한도를 기존의 91조엔에서 101조엔으로 증액하였으며 이는 9월과 10월 금융정책회의에서 한도를 각각 10조엔 및 11조엔 증액한데 이어 2개월만에 추가 증액을 결정한 것으로 해외경제 둔화로 인한 내수시장 악화 심화에 따른 결정이라고 언급
- 또한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 탈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실현을 위한 정부와 일본은행간의 정책제휴 강화를 위해 공동성명을 채택

□ 이처럼 인위적으로 엔화약세를 유도하는 일본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하여 독일·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최근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발표에 대하여 독일연방은행의 바이트만 총재는 일본정부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환율문제가 더욱 정치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 기획재정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부품)·기계·철강·가전·섬유 등의 수출이 둔화 또는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환위험관리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환율하락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함
- 한편, 일본 내에서도 지나친 엔화약세는 수입비중이 높은 일본기업의 비용 증가, 일본 국채시장에서의 외국인 이탈 우려 등 일본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높은 정부부채 수준도 새 정부 정책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선임연구원 정은경